

기울고 과장된 구성에 대한 연구: 미움과 분열 구조의 허점들

Essay on a Prejudiced and Distorted Construction: Dynamism of Hatred and Split

전영기 _증앙일보

Chun, Young Gi _Joongang Ilbo

I. 왜 공공성인가

서울 한남동의 리움 미술관엔 ‘기울고 과장된 구성에 대한 연구(김홍석, 2010년 합성수지 / Study on slanted hyperbolic constitution-act)’라는 조형물이 전시돼 있다. 8개의 형태와 크기가 다른 사각 상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미술작품이다. 김홍석 작가는 인생이나 세계의 부조리를 다뤄보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나는 공공성을 잃어버린, 혹은 공공성이 매우 적은 한국 사회를 예술화한다면 아마 이런 작품이 나올 것이란 생각해 봤다.

한국 정치,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기울고 과장된 구성’ 같은 불안함 속에 빠져있는 것 같다. 공공성은 공동체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예외법절, 정체성, 애국심, 법, 공권력, 정치, 공교육,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하지만 개인이 할 수 없는(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경제성장정책, 국민연금, 군대) 어떤 속성, 태도, 장치, 제도, 구조, 체제를 말한다.

공공성은 사익성이라는 말(馬)을 잡아끄는 고삐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사회는 잘 형성된 공공의 구조 속에서 각 구성원들이 사심,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아닐까. 사익성 과잉, 공공성 결핍은 한국 사회의 한 특징이다. 사심, 사적 욕망, 사적 이익은 한 쪽으로 기울고 과장되기 마련이다. 사익성이

여과 없이 표출되고, 조정되지 않는 사회는 기울고 과장된 구성이다. 기울고 과장된 구성을 균형 잡히고 사실에 기초한 조형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이 공공성 건설 혹은 공공성 회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II. 미움과 분열의 구조

나는 공공성의 여러 측면 가운데 정신적+정서적 태도에 관심을 갖고 싶다. 한국 사회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진영으로 모든 측면에서 썩 갈라져 있는데 그 적대성, 미움과 분열의 수준이 공동체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져있다. 한국 내부의 기득권, 보수적 지배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평양 정권을 따르는 것도 마다 않겠다는 극단적 정치세력(통합진보당)도 미움과 분열의 적대적 생태계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아니겠나? 우리 생태계에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통합진보당은 그 활동을 용납할 순 없지만 기원은 이해할만하다.

무슨 내전이라도 일어날듯 숨 막히는 미움과 분열의 정신적+정서적 태도를 일단 응급조치로라도 누그러뜨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미움과 분열은 처음에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무슨 좋은 일을 해보려다 상대방의 벽에 부닥쳐 부수적으로 생겨난 정신적+정서적 태도다. 그런데 어느새 부수적인 미움과 분열의 태도가 양 진영의 본성으로 굳어져 그 자체로 공동체를 해치는 수준이 된 것이다.

상식과 사실관계로 보면 자명한 하나의 판단이 가능한 사안인데도 미움과 분열의 구조 속에 들어가면 정 반대의 두 가지 판단이 나오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이런 공동체는 짜개진 공동체, 두 개의 세계가 따로 노는 공동체가 되기 십상이다. 2013년 11월에 벌어졌던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경찰 충돌사건’은 한마디로 ‘국회의원의 무례한 언행사건’에 불과했다.

국회의원이라 해도 국회에 주차된 관용버스를 발로 툭툭 차면서 운전 공무원에게 “야, 차 빼!”라고 반말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발로 툭툭 찬’ 부분과 ‘반말’

을 한 부분은 강 의원도 인정하고 있다. 예의와 상식이 중시되는 사회라면 강 의원의 그 무례한 부분이 문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는 청와대 경호실의 권위주의적 태도’로 규정됐고, 이 문제 때문에 국회가 파행될 걸 우려한 국회의장이 청와대에 유감을 표명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세상의 판단도 진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사건은 헌법적 특권을 누리는 존재라도 반말과 무례는 곤란하다는 단일한 교훈으로 사회의 기억 속에 축적됐어야 할 교훈 사건이었다.

이 사안은 단발성으로 그친 우발적 사건에 불과하지만 한국 사회의 크고 작은 수많은 이슈들이 진영과 관계없이 비교적 자명한 판단이 가능한데도 미움과 분열의 구조 속에서 양 극단의 판단으로 치닫는 현상을 웅변했다. 자명한 사실에 대한 기울고 과장된 판단이 공동체의 적대성을 더 강화하고 이 적대성이 기울고 과장된 판단을 낳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도식화하면

(투입) 자명한 사실 → (관통) 미움과 분열의 구조 → (산출)기울고 과장된 판단 악순환이 되겠다. 자명한 투입이 기울고 과장된 산출이 되는 과정에 미움과 분열의 구조가 있다는 얘기다.

III. 미움과 분열의 전선들

2013년 한 해 한국 정치사회를 흔들어 놓고 공동체의 진전을 가로막은 미움과 분열의 전선들을 다음과 같이 목록화 해봤다.

① 선거개입이나 대선불복이나

- 국정원 및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수사와 재판진행중) vs.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 내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일부 불복기류
- 대통령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지시가 대선 결과의 합법성, 박근혜 대통령

의 민주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일로 확산될 것이라는 박 대통령 주변의 과장된 인식들(8월 장외투쟁 때 받아들였으면 특위에서 끝내고 정치 정상화의 계기됐을 가능성)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입장에서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는 점에 대한 예민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했음 (대통령의 공감력, 언어력, 정치력이 필요했던 지점)

- 새정치민주연합의 특검+대선 불복은 기울고 과장된 주장의 사례(특검은 재판진행 중인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헌법위반 사고로 누구도 진지하게 문제제기 하지 않음. 대통령 퇴진주장은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심리 일 뿐 아니라 대통령과 그의 과거, 유신회귀의 이미지에 근거한 적대적인 감정의 표출처럼 보임. 새정치민주연합내 특정 집단은 통합진보당의 반한국적 정체성과 사제단의 비신사적인 불복태도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로 상식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할 정치적 책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에 빠져있다.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헨리 키신저).

② NLL포기냐 아니냐

- 대화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상호작용. 대화 당사자인 노무현과 김정일이 NLL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이해했고 처방했는지를 텍스트에 기반해서 읽으면 답이 나온다고 봄. 그것을 새누리당이나 친노 입장, 제3자가 가능하기라도 한 듯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시도한 접근법 자체가 잘못 됨. 청자와 화자의 상호이해라는 측면에 충실하면 양자는 첫째, NLL를 포기하기로 했고(노무현의 양보) 둘째, 해주공단을 만들기로 했고(김정일의 양보) 셋째, 양자의 양보는 서해지역에서 평화와 산업을 일으키려는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음. 이걸 그냥 딱 보면 아는 현상학적 직관이다. ‘논리 세계’가 아닌 ‘생활 세계’의 문제임.
-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양자 간 합의안의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음.
 - ☞ 상대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주장에서 하나씩 빼주기

첫째, 새누리당은 노무현의 발언이 NLL을 포기할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둘째,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의 발언이 NLL을 포기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한다. 셋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의 발언이 서해상 불안정을 해소하고 산업적 번영을 일으키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고 NLL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누구와도 협상할 수 없는 한국의 영토선임 분명히 한다.

③ 중복불안감이나 중복몰이나

- 중복의 실체는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함. 정치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이 그 증거. 따라서 중복 불안감이 한국 사회의 주요한 민심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함. 국가가 선동하거나 정치적으로 부추기는 것과 관계없음.
- 대통령이나 집권당 지도자가 통합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극단 세력의 척결’ ‘단호하게 처리’ ‘용납할 수 없어’ 같은 배제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건 곤란함. 대통령이 가진 권력의 독점성과 크기를 감안할 때 대통령을 비판하는 비극단세력이나 중도세력들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임. 유신시대 때 민주화세력을 용공세력으로 몰아 탄압한 실제 역사적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함. 박 대통령은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태도에 있어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게 더 많음. 예를 들어 “중복의 실체는 있으나 중복몰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할 것” 같은 언어가 필요. 이런 발언은 검찰에 대한 건강한 가이드라인이 됨. (공감력, 언어력, 정치력)

④ 반칙과 외세와 기득권 탐욕의 부끄러운 현대사냐, 시대과제를 해결해 온 성공한 현대사냐(역대 대통령과 현대사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의 문제)

- 이승만 건국 대통령(한국을 김일성공산주의화로 직커냄+미국과 동맹으로 안보체제 확립), 박정희 산업화 대통령(공칠과삼론), 전두환 경제안정기, 노태우의 북방외교, 김영삼의 문민정치 완성, 김대중의 남북화해, 노무현의 권력기관 정상화와 정경유착 고리끊기, 이명박의 금융위기 극복같이 역대 대통령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온 측면을 존중해야 함.

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통합진보당 문제)

-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적 기원은 이해하나 평양지하당의 전통을 이어 받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방어력을 해체하는 다양한 주장의 반복성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용납할 수 없음. (헌법적으로 정당으로서 보호받고 예산의 지원을 받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공해선 안됨. 개별적인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는 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국가가 대응하면 될 것임.)
- 공공성은 공동체가 견뎌내기 어려운 최악의 극단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데서 합의 바탕이 마련됨. 현대 독일의 대연정같은 합의적 정치, 공공성 정치의 바탕은 기민당이나 사민당이 견디기 어려운 신나치당, 공산당을 1950년대에 정당해산으로 정리했기 때문임. 그렇지 않았다면 주요 정치세력의 배후와 음모를 주제로 한 광범위하고 깊은 ‘미움과 분열’이 형성돼 통합성의 정도가 매우 떨어졌을 것.

IV. 미움과 분열을 부추기는 10가지 태도

미움과 분열은 주제의 문제라기보다 태도의 문제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리 모순되고 공존하기 어려운 주제라도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태도를 준수한다면 미움과 분열이 구조화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최근 한국의 정치 경험에서 나타난 미움과 분열을 부추기는 태도들이다. 이런 태도를 중화하고 회피하려는 국민 윤리적, 상호 공존적 태도의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 ① 적반하장과 무례: 하나를 얻으면 둘을 내놓으라 한다(대화와 협상의 신뢰가 깨진다)
- ② 궁극의 존재에 대해 눈치보기: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불완전 사고 (종박세력의 평양눈치보기, 종박세력의 대통령 눈치보기, 문제인의 친노세력 눈치보기)
- ③ 신념과잉 책임결핍: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박창신 신부의 주장

- ④ 사실과 법리의 의도적 외면: 특검 주장
- ⑤ 하는 말과 듣는 귀의 불일치: 말의 책임성의 문제. 기껏 특정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만한 말을 해놓고 그에 대해 추궁하면 본질은 다른 데있다고 주장하는 ‘본질주의’가 말의 책임성을 깨뜨리곤 함.
 - ☞ 말은 일단 입에서 나오면 그 다음엔 듣는 사람의 것이라는 점을 깨우쳐야
- ⑥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 죄의식+수치심+제타의 부재(예의교육의 문제/羞惡之心은 義之端也)
- ⑦ 일면형 논리: 자기 논리만 일방적으로 얘기한다
 - ☞ 그가 몰랐던 다른 논리를 들이대면 누그러진다.
- ⑧ 과장형 논리: 용어와 프레임으로 먹으려 한다
 - ☞ 용어의 과장성, 프레임의 공허성을 지적하면 누그러진다.
- ⑨ 분절형 논리: 사실을 미분하고 쪼개고 논리를 극단으로 밀어부쳐 기울고 불균형한 비상식적 결론을 내린다
 - ☞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점과 비상식성을 지적하면 누그러진다.
- ⑩ 단정형 논리: 불확실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사실화한다
 - ☞ 사실의 미확정성을 지적한다. 그 사실이 확정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와 조건과 가정을 열거하면 누그러진다.